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69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 의 자 : 김주영 · 박 정 · 허성무
정태호 · 문정복 · 김태선
이학영 · 박홍배 · 이용우
이기현 · 천하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이라 한다) 이상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전월(인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건비용을 예치(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예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지급내역 확인 방법, 인건비용예치의 방법·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중 “제43조, 제44조”를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43조, 제44조”를 각각 “제43조, 제44조제1항”으로 한

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4조제3항·제5항, 제48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p> <p>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p> <p>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 비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이라 한다) 이상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 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용을 지출해서 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신 설>

이상의 사업을 하는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
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
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전월(인
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하
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
다.

<신 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건비용을 예치
(이하 이 조에서 “인건비용예
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
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
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신 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지급내역 확인 방법, 인건비용예치의 방법·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

② -----제43조, 제44조제1항-----

-----.

<p>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6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 항·제4항·제5항·제7항, 제 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p> <p>3.·4. (생략)</p> <p>③ (생략)</p>	<p>----- ----- -----제43조, 제44조제1항----- ----- ----- -----.</p> <p>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44조제3항·제5항, 제48조----- ----- ----- -----</p> <p>3.·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